

논란의 중심 '靑 청원 게시판' 성토장 변질 vs 대의 민주주의 보완장치

국민 목소리 즉각 반영 '큰 호응'
국정현안 관련 없는 게시글 많아
각종 민원, 광장에 매몰 우려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 6일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누리집 캡처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이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장치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와 함께 무조건적인 '성토장'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부터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으로 인한 상인들의 분노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은 여론의 지표이자 이슈의 발화점으로 작용해왔다. 이어 청소년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주취감형 폐지 등 국민의 의견이 분분한 사안부터 공분을 일으킨 범죄에 이르기까지 '뜨거운 감자'로 가득했다.

◆거름망 구실을 한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답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일종의 '거름망'이 작동하는 셈이다. 게시판 안내문에는 '일

반 민원 혹은 제안, 정책 참여 등은 국민 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달라'고 적혀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공무원이 해결해주지 않는 문제를 '높은 곳'에서 해결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청원 게시판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최근 서울시 자치구에 민원을 제기했던 이모(30) 씨는 "각 지자체의 민원 처리 과정이 굉장히 길고, 해당 공무원은 자신이

피해를 입을까봐 대중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민원을 넣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해결되지 않는 사실을 잘 아는 국민이 게시판에 목소리를 올린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각에선 각종 민원이 청와대 게시판으로 향하는 현상을 두고 '떼벌 창구'라고 규정한다. 학계는 이를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고 분석한다. 청원 게시판이 과도기적 역할을 하면서 생긴 진통이라는 설명이다.

이장영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조두순 재심 청원에 61만5000여명이 참여한 것은 국민이 그만큼 절박하고 호소할 곳 없었다는 뜻"이라며 "국회를 통한 입법의 경우, 일반인 입장에서 우리 지역구의 원 아니면 유명 의원에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방법이 안 보인다. 게다가 국회의원 선거는 4년에 한 번"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투표와 국회 입법 외에 시급하거나 절박한 문제에 대한 청원은 주권 행사의 한 방법이다. 미국 백악관 사례를 벤치마킹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국민의 목소리를 즉각 반영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제도로 자리잡아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토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으로 비선출직 관료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점 역시 청원 게시판의 수요를 높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חק각사 김모(33) 씨는 "지난 정부 이후로 지방자치단체 민원이나 정당을 통한 국회 내 어젠다 논의를 기대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내가 뽑은 대통령'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같은 흐름이 이어지자 일선 공무원들은 민원인으로부터 청와대 청원 이 야기를 듣는 일이 늘었다.

현직 공무원 A씨는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적겠다'며 업포를 놓는 민원인이 종종 있다"며 "민원에는 법의 사각지대를 알려주는 순기능도 있지만, '높은 곳'에 얘기하면 공무원도 원칙 없이 무조건 따를 것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 가끔 보인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풀뿌리에서 국회 내 어젠다로 흐르는 대의민주주의의 속 목소리가 하나의 광장에 매몰되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원 게시판이 일단 대통령 눈에 띄고 보자는 '성토장'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7일~10일 살펴본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좀과 값을 내려달라' '외국인에게 장가가야 하니, 한국어시험이라는 걸립들을 해결해달라' '군필자 전원을 공무원 시켜달라' '종합격투기를 올림픽 종목으로 만들어달라' 등 국정 현안과 관련 없는 내용이 쉽게 눈에 띄었다.

/이범중 기자 jaker@metroseoul.co.kr

이낙연 "대·중견·중기, 상생·공정 생태계 마련"

2018 중소기업 신년인사회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공정한 산업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8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기업 사이의 기술과 인력의 탈취를 엄벌하겠다. 또 전속거래 강요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시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이 총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중소기업의 더 큰 역할을 요구할 것"이라며 "중소기

업인 여러분께서 시대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해 더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관련 정부 주요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신산업과 신기술 도전 적극 지원 ▲규제혁파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혁신모험펀드와 재기 지원펀드를 통해 각각 도전적 창업과 재기를 돕고,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연대보증제도를 정책금융기관부터 전면 폐지하며, 중소기업 2만 개를 스마트공장으 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계획도 밝혔다. 이 총리는 "신산업은 규제 없이 (먼저)출발케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곧 가

시화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제도를 구체화하겠다"며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도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지방선거와 개헌 일정 등으로 사업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중소기업 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인들이 올해의 사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성어로 꼽은 '호시우행(호랑이처럼 보고 소처럼 간다)'을 언급하며 "현재의 위기를 선제 투자와 경영 혁신의 기회로 삼

아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높인다면 변화의 시대에 혁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한줄 News

정치·사회·산업

▲ 전국 초·중·고교의 내진보강 사업이 앞당겨진다. 교육부는 지진위험지역에 향후 7년간 1조1900억원을 투입,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2024년으로 앞당긴다.

▲ 11일부터 서울 영동3교에 40t 중차량이 다닐 수 있게 됐다.

▲ 중국 법원이 국내 게임사인 넥슨 PC게임 '던전앤파이터'의 지식재산권(IP)을 도용한 자국 게임사 4개 회사에 철폐를 가했다.

▲ 삼성전자가 보안 표준 기관 인증을 통해 스마트 TV 보안성을 입증했다.

마켓·부동산

▲ 회사채 발행시장이 올 초에도 국내 기업들의 자금 조달로 뜨거워질 전망이다.

▲ 오는 25일부터 청약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 권도 전매제한 규제가 시작된다.

유통&라이프

▲ 올해부터 16.4%나 인상된 최저임금 부담에 편의점업계가 비상에 걸렸다.

▲ 롯데그룹이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이사를 부회장으로, 이봉철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을 사장으로 승진 임명하는 등 정기임원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정초부터 노사갈등... 車·조선, 올해도 험난 예고

현대중·현대차·기아차 등
임단협 둘러싸고 갈등 지속
조선·車업계, 손실 우려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글로벌 경기 침체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내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이 노사간 갈등으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 노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임금·단체협상 갈등 분위기는 더욱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대차 노사의 경우 임단협이 해를 넘긴 것은 1967년 창사 이후 사상 처음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2월 29일 교섭에서 2016년 5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2016년과 2017년 2년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조합원들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는 9일 전체 조합원 9825명을 상대로 임단협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표자 8804명(투표율 89.61%) 가운데 4940명(56.11%)이 반대에 부결됐다. 노조는 상여금을 분할 지급하는

것과 적은 성과급 때문에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사는 앞서 ▲기본급 동결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지급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 등에 합의했다. 또 성과급은 산출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한편 단체협약 가운데 신규 채용 시 종업원 자녀 우대 및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결정을 받아들여 회사에 재교섭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중 분할 3사 노조도 9일 실시한 임단협 찬반투표를 가결시켰다.

분할 사업장인 일렉트릭, 건설기계, 로보틱스 노사는 최근 2016년과 2017년 임단협 교섭에서 임금 부분은 현대중 잠정합의안을 따르고, 단체협약도 큰 틀에서 현대중 단체협약을 승계하는 형태로 합의점을 찾았다.

현대차 노사는 9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교섭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잠정안 부결이후 세번째 교섭을 재개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12월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26일과 27일 2차례 교섭을 재개했다. 노조는 새해 들어 4일부터 부분파업을 벌이며 회사를 압박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9일 오전 11시30분부터 1조 조합원들이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으며 오후 3시30분 출근하는 2조 조합원들도 오후 8시20분부터 4시간 파업했다.

현대차그룹의 맹형인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이 해를 넘기면서 그룹 계열사들도 2017년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교섭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다. 기아차와 현대제철 등 계열사 임금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해 6월부터 임금협상을 시작했지만 아직도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기아차 노조는 15일까지 회사에 추가 제안을 내놓으라고 요청했으며 16일 중앙정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기로 했다.

현대제철 노사도 비슷한 상황이다. 현대제철 노조는 잠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73.5%(2835명)의 반대표가 나와 부결됐다. 현대제철 노조 조합원 4322명 가운데 3856명이 찬반투표에 참여했다. 현대제철 노사가 앞서 마련한 1차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4만 8408원 인상, 성과급 및 일시금 1143만 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계 관계자는 "임단협을 둘러싸고 기업 노사간 입장차를 좁혀줄 수 없게 되고 있다"며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이 올해도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 관계 악화는 결국 직원들의 피해만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훈 기자 ysw@